

한국시민사회의 환경: 정치적 환경과 경제·사회적 환경을 중심으로*

김 성 현**

이 글은 한양대학교 제3섹터 연구소가 CIVICUS와 공동으로 수행한 제2단계 시민사회지표(CSI)연구(2008-2010) 중 『한국시민사회환경』에 관한 보고서이다. 2단계 연구 기간 중 한국 시민사회의 환경은 보수정권의 출현과 세계경제의 불황속에서 시민들의 정치적인 권리와 정치적인 다원성이 약화되고 경제적인 양극화의 심화가 증가했다. 사회적 갈등이 증가하는 가운데 시민사회의 활동은 위축되었다. 본 연구는 국제적인 수준에서 한국은 시민사회 발전을 위한 환경들을 충실히 갖추고 있지만, 아직 우리사회가 달성하고자 하는 인권과 민주주의의 경제적인 정의에 도달하기까지에는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적지 않음을 보여준다.

주제어: 한국시민사회환경, 한국시민사회지표, CIVICUS, 시민사회, 민주주의, 양극화, 국제시민사회

* 이 논문은 2010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인문사회연구역량강화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0-329-B0001).

** 한양대 국가전략연구소

글을 시작하며: 한국사회의 보수화와 시민사회의 환경

이 글은 한양대학교 제3섹터 연구소가 CIVICUS와 공동으로 수행한 제2단계 한국 시민사회지표 연구 중 『한국시민사회의 환경』에 관한 보고서이다. 제2단계 한국 시민사회지표 연구기간(2008-2010)은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이후 2년이 지난 시점과 일치한다. 2007년 12월 대선에서 48.7%의 득표를 한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했다. 또한 한나라당이 2008년 4월 총선에서 153석을 획득하고 야당인 민주당이 91석을 획득함으로써 행정부와 의회를 모두 보수적인 정치세력이 석권했다. 한편 진보성향이었던 민주노동당이 내분을 겪은 후 진보신당이 분리되었다. 이러한 정치환경은 한국사회의 보수화와 진보세력의 급속한 후퇴로 이어졌다.

취임후 이명박 대통령은 기존의 햇볕정책과 거리를 두었고 친미적인 외교노선을 분명히 했다. 특히 취임 직후인 2008년 4월 미국산 소 수입에 대한 규제완화는 장기간에 걸친 대규모 촛불시위를 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 시위는 새 정부의 권위주의적인 통치스타일과 친기업적인 정책기조, 그 외에 복지의 축소와 부적절한 경력을 지닌 인사들의 각료임명 등에 대한 시민들의 비판적 의식과 결합됨으로써 더욱 탄력을 받았다. 결국 시민들의 저항은 내각의 교체와 이명박 대통령의 정책 프로그램의 부분적이고 일시적인 후퇴, 대통령의 사과 등으로 일 단락되었다.

2008년 말, 정부와 시민들의 관심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출현함으로써 경제적인 문제를 향해 이동했다. 이명박 정부는 공공재정 지출의 확대와 조세정책 등을 통해 금융부문의 동요와 고용의 불안을 억제함으로써 경제회복을 도모했지만, 상위계층들에 대한 감세와 환경단체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킨 대규모 토목사업, 그로 인한 사회적 취

약계층들의 복지의 축소로 인해 경제적인 양극화는 더욱 확대되는 추세이다.

집권 2년차인 2009년의 국내정치상황은 경제위기상황에서 2008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되는 듯이 보였지만 2009년 1월 20일 용산에서 재개발에 반대하는 시민들과 강제철거에 나선 용역들, 경찰들이 대치하는 과정에서 철거민 5명과 경찰특공대 1명이 사망하고 23명이 부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용산참사를 둘러싸고 사고당시의 폭력문제, 사회적 불평등의 문제, 안전대책, 시민에 대한 경찰의 과잉진압문제 등이 논란으로 부각되었고 경찰의 수사발표, 정부의 홍보지침과 왜곡보도 등의 논란이 제기되었다.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사라지지 않은 채 5월에는 노무현 전대통령이 부패사건에 의해 수사를 받던 도중 자살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 뒤에 이어진 김대중 전대통령의 사망과 더불어서 이 사건은 또다시 이명박 정부에 반대하는 정치세력을 결집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경제적 정의와 관련된 갈등도 계속 발생했다. 5월에는 중국의 상하이 자동차가 쌍용자동차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해고당했고, 고용보장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시위는 다시 한 번 공권력과 충돌하는 계기가 되었다. 정부는 일시적으로 친기업적인 정책을 유보하고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보다 큰 관심을 기울일 것을 약속하고 소통의 리더십을 강조함으로써 정치경제적 위기상황을 피할 수 있었지만, 이 사건들은 사회적 분열의 양금을 남겼다.

진보학자들에 대한 탄압, 정부에 비판적인 네티즌과 블로거들에 대한 수사와 구속, 방송의 공공성을 크게 후퇴시킨 미디어법의 날치기 통과, 친정부적인 인사들의 미디어 지배, 여기에 반대하는 언론인들의 해임과 구속 등 사상, 집회결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건들이 끊이지 않았다.

환경의 파괴와 공공재정의 부담을 우려하는 비판적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강행된 4대강 사업을 비롯한 대규모 토목공사와 토지의 공공성보다는 시장의 이익을 우선시 하는 주거공간의 개편과 재개발 사업들은 가진자들과 박탈당한자들의 사회적 분할을 가져온 정책들이었다. 글로벌 경기침체 속에서 폭등하는 물가를 따라가지 못한 실질임금과 사회적 안전망의 취약, 교육의 공공성 파괴로 인한 막대한 사교육비의 지출은 사회적 약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

외교, 안보환경 역시 보수화 되어 평화공존의 분위기가 보다는 군사적인 대치를 불사하는 남북관계가 형성되었다. 김대중 정부 이후 한국 대외정책의 근간을 이루었던 햇볕정책이 보수정권에 의해 크게 후퇴한 상황에서 북한 역시 6자회담에서 이탈하여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을 강행하였고, 경색된 남북관계 하에서 금강산 관광객이 북한군에게 피격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NLL을 둘러싼 갈등은 평화적인 협상을 통한 돌파구가 마련되지 못한 채, 서해에서 군사적 충돌로 이어졌다.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사건은 한국전쟁 이후 가장 심각한 위기상황을 연출하였고 한반도를 군사적인 긴장으로 몰아갔다. 평화공존을 표방하는 사회단체와 정치세력이 설 자리는 줄어들었고 무력응징과 보복을 주장하는 정치세력들이 더욱 활개를 쳤다.

이 글의 구성은 제1차 한국시민사회지표 보고서의 구성을 그대로 따랐다. 1차 보고서의 구성을 그대로 답습하는 이유는 첫째, 그것이 CIVICUS가 요구하는 글의 구성방법이었고 둘째, 1차 연구와 2차 연구의 비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글에서 활용한 Freedom House, World Bank, Transparency International 등 국제기구, NGO들의 지표들 역시, 필자가 임의적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국제적인 비교를 지향하는 시민사회지표(CSI) 연구가 참고하도록 요구한 것임을 밝힌다. 이 기관들의 자료들은 국제적인 비교연구를 수행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지

만,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피부로 느끼는 문제들에 다가가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 글은 전반적으로 CSI 보고서의 틀을 유지하지만 부분적으로 국내의 정부기관, 학술논문, 언론, 시민단체 등의 자료들을 활용해 부연적인 설명을 덧붙였다.

1. 정치적인 환경

1) 정치적 권리

자유선거와 참정권의 행사에 있어서 한국에서 자유민주주의적 원칙은 충실히 준수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정당체계에 있어서도 다원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이념에 있어서 여전히 보수성이 강한 두 개의 정당이 다수 의석을 점유하고 있는 양당제적 정치체제가 운영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민주적이고 다원적인 정치체제가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부패와 권력 남용, 불투명한 영향력의 행사가 중앙정치와 지방정치, 재계,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

<표1> Freedom House Political Rights Index¹⁾

연도	1985-1987	1988-2003	2005	2011
지수	4	2	1	1

자료: Freedom House(2004; 2005; 2011)

<표1>의 프리덤 하우스 정치적 권리 지표는 한국에서 정치적인 권리들이 매우 우수한 편이며(1등급) 자유민주주의가 꾸준히 발전하고

¹⁾ 이 지수는 최고 1에서 최저 7까지 순위가 정해진다.

있음을 보여주고 있지만, 한국에는 여전히 시민들의 정치적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법과 제도가 존재한다. 국가보안법은 북한의 미디어에 대한 접촉과 교류들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다. 독재정권시절 시민들의 정치적인 자유를 억압해 온 국가보안법은 1992년 UN 자유권위원회의 한국정부에 대한 최종견해, 1995년 UN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한국방문 보고서, 2008년 UPR 한국정부 보고서를 통해 폐지가 권고되었지만 여전히 존속하고 있다. 민주주의의 발달과 더불어 국가보안법이 정치적 반대자들의 억압을 위해 활용된 사례는 계속 줄어드는 추세이지만 2008년 이후 국가보안법 관련 사건들이 잇달아 터져 나왔다. 2008년 9월 27일 실천연대 사건, 같은 해 2월23일 사회주의노동자연합사건, 2009년 5월 7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사건 등이 일어났다. 또한 몇몇 네티즌에 대해 국가보안법을 적용한 사례가 있었다.

2) 정치적인 경쟁

정당의 수, 이데올로기적 스펙트럼, 제도화수준, 정당간 경쟁

제18대 총선결과 한나라당이 153석(비례대표22석), 민주당이 81석(15석), 자유선진당이 18석(4석), 친박연대가 14석(8석), 민주노동당이 5석(3석), 창조한국당이 3석(2석), 무소속이 25석을 차지함으로써 보수적인 정치세력이 크게 약진하고 진보성향의 정당들이 크게 후퇴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제18대 총선은 보수정치세력의 약진뿐만 아니라 46%에 불과한 투표율 저조와 (17대 선거는 60%), 18%에 불과한 20대 층의 정치적 외면 현상 등으로 특징지어진다. 이는 중앙정치의 실종을 의미하는 결과이며, 한국민주주의의 심각한 후퇴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제 18대 총선의 또 다른 특징은 정당정치의 실종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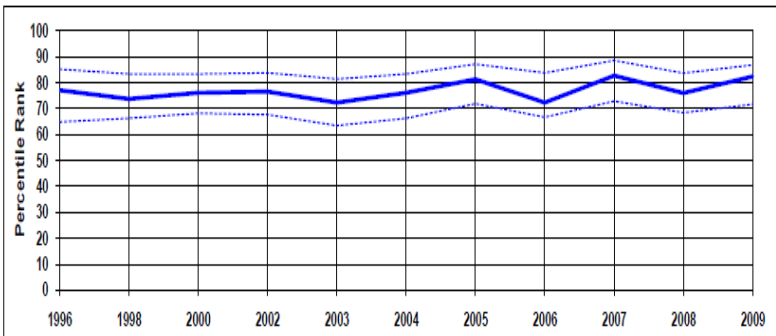
18대 총선에 참가한 정당 중 17대 총선에 참가했던 정당은 단 두 개의 정당(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에 불과했다. 극도의 분열과 급조된 정당들이 참가한 선거에서 보수세력은 또 다시 지역색에 따라 한나라당과 민주당을 중심으로 결집하는 양상을 보인 반면, 가뜩이나 취약했던 진보세력은 중심을 상실한 채 포류하게 되었다. 또한 선관위의 권한 확대와 엄격한 부정선거 기준 등으로 인해 18대 선거는 시민들의 활발한 정치참여와 비판이 실종된 채 치루어졌다.

이처럼 정당의 수는 증가했지만, 이데올로기적인 스펙트럼은 오히려 보수쪽으로 크게 기울었고, 제도화 수준은 오히려 후퇴했으며, 정당간의 경쟁역시 다양성을 잃은 채 두 보수 정당의 당리당락을 둘러싼 대립으로 축소되었다.

3) 법의 지배

정부나 시민은 얼마나 법을 준수하고 있는가?

〈그림1〉 세계은행 Worldwide Governance Indicators: 한국의 법의지배 백분위



자료: World Bank

아래의 그림은 세계은행의 WGI가 발표한 법의 지배 항목에서 한국의 백분위이다. 이 지표는 싱크탱크, 국제기구, NGO, 여론조사 기관들이 발표한 지표들을 통합한 것으로서 그림의 백분위는 214개 국가 중 한국보다 하위에 속한 국가들의 비율을 표시한 것이다. 점선은 90%의 신뢰도에서 오차 범위를 표시한 것이다.

이 그래프는 한국의 법의 지배 수준이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볼 때 양호한 수준임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의 헌법은 정치적인 자유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 시민단체들은 헌법을 비롯한 여러 법률들이 공권력에 의해 자의적으로 적용되고 있다고 비판하곤 한다. 또한 헌법과 하위 법률들이 충돌하는 사례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위헌심판에 대한 요청이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09년 9월 헌법재판소는 야간시위를 금지하는 규정의 위헌성을 지적하고 2010년 6월까지 법을 개정하도록 판시했다.

인권단체들과 사회복지조직들, 기타 시민단체들은 법과 제도적으로 볼 때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다. 그러나 제도적인 틀의 외부에서 사회 조직들을 구속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 전반적으로 민주적이고 다원적인 정치체제가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부패와 권력 남용, 불투명한 영향력의 행사가 중앙정치와 지방정치, 재계,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 2009년 이명박 대통령은 고위관료들의 반부패노력을 촉구하였지만 주요각료들의 인사청문회 때마다 후보자들의 부적절한 전력이 문제가 되곤 했다.

사법부는 일반적으로 독립성을 갖추고 있다고 간주된다.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시민들이 재판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아직 배심원제도나 참심원 제도가 여전히 실험단계에 있다. 인권의 중요성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은 높아졌지만 검찰과 경찰의 강압수사가 가끔씩 보도된다. 교정기관에서 수감시설의 문제점에 대한 비판이 있기는 하

지만 간수들의 구타나 협박같은 인권침해 사례는 드문 편이다. 이처럼 제도적으로 볼 때, 한국에서 법의 지배는 건전한 형식적인 틀을 갖추고 있지만 실제 법의 적용과 준수에 있어서는 아직 많은 과제들을 안고 있다.

4) 공공부문의 부정부패

2006년 국제투명성기구의 NIS(National Integrity system)는 한국이 정치적인 리더십과 대중의 요구를 통해 비교적 단시간에 거버넌스와 청렴도의 개선을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발표는 세계의 159개 국가들을 비교한 것으로 현재 대한민국 국민이 느끼는 부패도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고 할 것이다. 과거 한국 정부는 급속한 경제발전을 추진하는 가운데, 소수 재벌을 중점적으로 육성하였으며 그로인해 정부와 기업 간 불건전한 거래들이 지속되었다. 민주화와 경제개혁으로 인해 급속한 발전에 대한 기대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국의 청렴도와 반부패 활동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며 유사한 경제적 수준에 있는 OECD 국가의 청렴도와 비교해 볼 때에도 한참 뒤처진다.

국제투명성기구의 2010년 부패인지도수(Corruption Perception Index)에서 한국은 10점 만점 기준에 5.4점으로 178개 국가 중 39위에 머물렀다(Transparency International 2010). 이는 159개 국가중에서 5.0점으로 40위를 차지했던 2005년 CPI와 비교해 볼 때 한국의 부패인지도가 그다지 나아지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한편 뇌물공여지수(Bribe Payers Index)에서도 한국은 7.5점으로 22개 국가 중 14위를 차지함으로써 18위를 기록했던 2005년에 비해 향상되었지만 여전히 선진국들과의 격차는 큰 상태이다.

〈표2〉 국제투명성기구의 뇌물공여지수 순위

Rank	Country/Territory	BPI 2008 Score	Standard Deviation	Confidence Interval 95%	
				Lower Bound	Upper Bound
1	Belgium	8,8	2,00	8,5	9,0
1	Canada	8,8	1,80	8,5	9,0
3	Netherlands	8,7	1,98	8,4	8,9
3	Switzerland	8,7	1,98	8,4	8,9
5	Germany	8,6	2,14	8,4	8,8
5	Japan	8,6	2,11	8,3	8,8
5	United Kingdom	8,6	2,10	8,4	8,7
8	Australia	8,5	2,23	8,2	8,7
9	France	8,1	2,48	7,9	8,3
9	Singapore	8,1	2,60	7,8	8,4
9	United States	8,1	2,43	7,9	8,3
12	Spain	7,9	2,49	7,6	8,1
13	Hong Kong	7,6	2,67	7,3	7,9
14	South Africa	7,5	2,78	7,1	8,0
14	South Korea	7,5	2,79	7,1	7,8
14	Taiwan	7,5	2,76	7,1	7,8
17	Brazil	7,4	2,78	7,0	7,7
17	Italy	7,4	2,89	7,1	7,7
19	India	6,8	3,31	6,4	7,3
20	Mexico	6,6	2,97	6,1	7,2
21	China	6,5	3,35	6,2	6,8
22	Russia	5,9	3,66	5,2	6,6

자료: Transparency International 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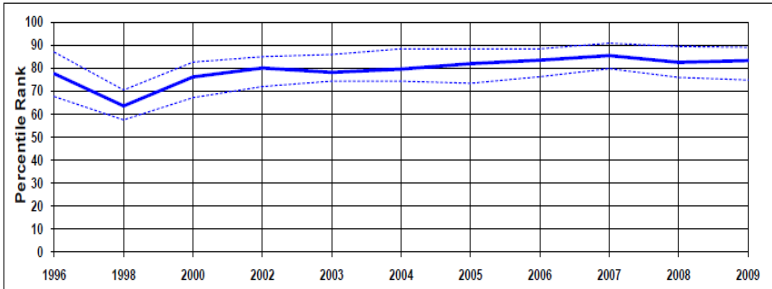
5) 국가의 효율성

국가는 규정된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얼마나 효율적인가?

이 질문은 국가의 “규정된 역할”과 “효율성”이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매우 모호하다. CIVICUS는 국가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서 세계은행의 거버넌스 지수를 활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세계은행의 거버넌스 지수는 한국의 국가효율성 백

분위를 84위로 평가하고 있다. 이는 2005년 83위와 거의 유사한 수준이며, 세계의 다른 나라들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 할 수 있다.

〈그림2〉 세계은행 Worldwide Governance Indicators, 한국의 국가효율성 백분위



자료: 세계은행 2008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세계경쟁력 2010년 순위에서 한국은 58개국 중 23위로 일본, 프랑스, 벨기에 보다 상위에 위치하였다. 이는 이명박 정부 출범 첫해인 2008년 31위에서 2009년 4단계 뛰어 오른 데 이어 다시 4단계가 상승한 것이다. 한국의 경쟁력 순위가 상승한 것은 IMD의 4대 평가 부문 중 경제성과와 정부효율성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기 때문이었다. 특히 2010년 정부효율성 순위는 2009년 36위에서 26위로 10단계 올라갔다. 특히 재정정책(14→13위)을 비롯해 노동관련 기업 관련법 부문(48위→44위), 정치적 불안 등 사회적 여건(51→49위) 등이 2009년에 비해 나은 평가를 받았다.

그런데 이와 같은 국제금융, 경영기관의 순위는 지나치게 국가와 시장경제의 관계에 입각한 기준들에 의해 결정되는 경향이 있다. IMD의 경우 국가경쟁력의 개념을 “기업의 경쟁력을 지속시킬 수 있는 제반 여건들을 창출하고 유지할 수 있는 국가의 능력”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정의에 따라 IMD 지표는 시장에 대한 규제완화, 공공부문의 기구축소와 인력감축, 공기업의 구조조정 등을 효율성과 경쟁력의 중요한 요소로 평가하고 있다. 사회복지와 관련한 척도의 고려는 부족한 편이고 심각한 왜곡이 일어나기도 한다. 예를 들어 2010년의 경우 한국 통계청의 자료에 근거해 IMD는 한국의 장기 실업률을 0.02%로 58개 평가국 중 가장 낮은 국가로 평가하고 있다. 이는 구직단념자와 취업준비자들을 실업자에 포함하지 않은 결과였다.

국가의 효율성을 이러한 시장경제적인 기준이 아니라 재난, 생활, 건강, 범죄, 환경, 안보 등의 위험에 대한 정부의 능력으로 조사한 연구로는 한국행정연구원 사회조사센터가 2011년 3월에 발표한 “한국 사회의 위험과 위험관리 수준”에 대한 전문가 조사결과가 있다. 조사에 응한 47명의 전문가들은 우리 사회 전반적인 위험도와 위험관리 수준에 대해 100점 만점 기준으로 각각 58.4점과 49.9점으로 평가했다. 위험관리 주체로서 정부와 시민사회의 위험관리 능력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는 정부 47.2점, 시민사회 37.2점으로 “보통” 수준인 50점을 넘지 못했다. 또한 정부의 위험관리 능력은 중앙정부(54.1)와 지방정부(40.4) 사이에 차이가 큰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시민사회의 위험관리 능력은 공동체(38.3)와 개인(36.1) 사이에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위험유형별로 살펴보았을 때 중앙정부의 위험관리 능력은 안보위험에서 가장 높았고(59.7), 환경위험에서 가장 낮았다(46.7). 지방정부의 위험관리 능력은 생활위험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으며(48.0), 환경위험의 관리 능력이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27.9). 한편 시민사회의 위험관리 능력은 공동체와 개인 모두 생활위험에서 가장 높게(공동체 46.3, 개인 45.7), 환경위험에서 가장 낮게(공동체 28.0, 개인 19.7) 평가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사회의 전문가들이 정부 효율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

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표3〉 한국사회의 위험과 관리주체들의 관리능력

위험의 종류		중앙정부(점)		지방정부(점)		공동체 수준		개인 수준	
		항목별 평균	유형별 평균	항목별 평균	유형별 평균	항목별 평균	유형별 평균	항목별 평균	유형별 평균
재난 위험	수해·가뭄	60.9	52.9	47.3	42.7	42.5	37.8	35.6	33.3
	지진	38.3		28.4		24.9		20.9	
	화재	59.5		52.5		46.1		43.6	
생활 위험	교통사고	61.1	58.3	51.6	48.0	48.6	46.3	50.5	45.7
	산업재해	55.5		44.4		44.0		40.9	
건강 위험	성인병	59.8	56.9	43.8	42.7	44.4	42.2	54.5	45.2
	신종전염병	56.9		42.5		41.5		40.7	
	유해식품섭취	57.7		45.0		46.1		46.2	
	광우병	53.2		39.6		37.0		39.6	
범죄 위험	강력범죄	57.3	54.3	51.5	43.8	44.9	41.0	42.9	40.4
	성폭력	52.8		46.6		42.8		44.4	
	사이버피해	52.9		33.3		35.4		34.1	
환경 위험	기후변화	46.1	46.7	29.7	27.9	32.1	28.0	23.1	19.7
	신기술위험	43.9		25.8		24.8		18.9	
	원자력발전소 사고	50.0		28.3		26.9		17.0	
안보 위험	테러·전쟁	59.7	59.7	35.5	35.5	31.1	31.1	24.0	24.0
전체 평균		54.1		40.4		38.3		36.1	

자료: 행정연구원 사회조사센터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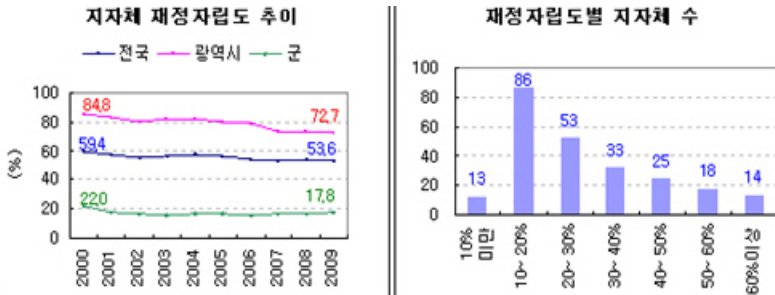
6) 지방분권화

정부지출에서 지방정부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인가?

CSI 연구는 이러한 질문을 통해 지방분권화의 정도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 글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재원으로 지자체 재정을 충

당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재정자립도를 활용하여 지방분권화의 정도를 가늠하고자 한다.

〈그림3〉 한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추이



자료: 프레시안(2010.5.27)

위의 그림에 나타나듯이 한국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자립도는 2000년 59.4%에서 2009년 53.6%로 떨어졌으며 이러한 하락세는 광역시, 군단위 모두에 해당된다. 이처럼 전반적으로 재정자립도가 하락세를 나타내는 가운데 자치단체 간 양극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서울, 인천광역시의 재정자립도는 각각 90%, 74.2%로 60%가 채 되지 않는 다른 광역시에 크게 앞서있다. 광역도의 경우는 경기도만 75.9%를 기록하고 있고 대부분의 광역도가 20-30%의 낮은 재정자립도에 머무르고 있다. 무엇보다 전체 기초 지자체의 40.9%가 20%의 재정자립도에 못 미치고 있는 상황이라 중앙정부의 지원에 의존하는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부채가 1천637조원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부채는 지난 5년간 58.4%나 급증했다. 즉 중앙정부의 재정건전성이 악화됨으로 인해 지방재정에 대한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현실은 정부권한의 분권과 경제적

자원의 분산을 어렵게 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과거 정부가 추진했던 행정도시 건설, 혁신도시건설,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지방분권화 정책들이 사회적 갈등 속에서 크게 수정되거나 폐지됨으로써 지방분권화는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기본적 자유

1) 시민적 자유

법과 관행속에서 시민의 자유(예컨대 표현, 집회, 결사의 자유)는 얼마나 보장되고 있는가? 2011년 프리덤 하우스가 발표한 시민자유지수(Civil Liberties Index)에서 한국은 2등급을 차지함으로써 시민적 자유가 잘 보장된 국가로 간주되고 있다.

〈표4〉 Freedom House Civil Liberties Index

연도	1987	1988-1992	1993-2005	2011
지수	4	3	2	2

자료: Freedom House

그러나 CIVICUS 제2단계 연구 기간인 2008년-2010년 기간 동안 한국에서는 시민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수많은 사건들이 일어났다. 여전히 국가보안법은 한국에서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으며, 이명박 정부에서 국가보안법위반 사례는 늘어나고 있다. 국가정보기관(국정원)의 민간사찰내용을 폭로한 박원순변호사에게 ‘국가’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국정원이 국가를 원고로 민사소송을 제기하

고, 자신의 신념에 따라 정부정책에 비판적이고, 양심선언을 한 공무원들에게 파면과 징계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2008년 국방부는 23권의 서적을 불온서적으로 지정하여 영내 반입을 금지했고, 이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군법무관 중 2명을 파면하면서 군인들의 알권리와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고 양심의 자유를 억압했다.

〈표5〉 2008-2009 국가보안법으로 인한 기소 및 구속자 수

	입건자수	기소	불기소	구속	기타
2008	46	32	10	16	4
2009	57	43	9	18	5

자료: 대검찰청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으로서 민주적인 원칙에 입각한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집회 및 결사의 자유는 집시법 외에 형법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 집회시위 자유의 억압은 2008년 촛불집회를 거치면서 강화되었다. 처벌이전 정부에 비해 집시법 관련 구속자가 급증했다. 또한 이명박 정부 하에서 경찰은 집회결사의 권리를 행사하는 시민들에게 폭력을 가했다. 촛불시위자들에 대한 폭력과 2009년 1월 용산참사, 화물노동자들의 파업, 쌍용자동차 노동자 파업에 대한 공권력의 폭력이 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한국정부는 또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여부를 놓고, 기획재정부가 작성한 ‘2009 예산지침’과 경찰청이 작성한 ‘불법폭력시위 관련 단체’라는 기준을 적용해,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거나 보조금 신청 및 지급 단계에서 서약서 작성을 요구함으로써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했다.

〈표6〉 월별 집회·시위중 집시법 위반 사법처리 인원

구분		계	구속	불구속	기타
2008년	계	2,381	38	2,159	184
	1월	157	2	127	28
	2월	77		64	13
	3월	146	2	126	18
	4월	113	1	96	16
	5월	130	1	118	11
	6월	135	6	127	2
	7월	308	4	287	17
	8월	370	7	350	13
	9월	404	5	370	29
	10월	279	2	268	9
	11월	155	7	140	8
	12월	107	1	86	20
2009년	계	1,802	40	1,394	368
	1월	63		56	7
	2월	98		90	8
	3월	137	5	114	18
	4월	94	4	68	22
	5월	165	18	136	11
	6월	167	1	139	27
	7월	113	1	92	20
	8월	188	4	141	43
	9월	204	2	132	70
	10월	317	3	237	77
	11월	205	1	141	63
12월	51	1	48	2	
2010년	1월	109	2	220	59
	2월	102		83	19
	3월	71	1	61	9

자료: 경찰청

2) 정보에 대한 권리

정보에 대한 공적인 접근은 얼마나 보장되어 있는가? 시민들은 정부 문서에 얼마나 쉽게 접근하고 있는가?

1996년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와 공공기관의 공개를 법률로 규정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2006년에는 온라인 정보공개시스템이 개통되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려는 노력이 있었다. 그러나 이명박에서는 이러한 노력이 정지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직속기관이던 정보공개 위원회는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지위가 낮아졌으며 정보공개법의 개정논의도 답보상태를 면치 못했다.

정부가 발의한 “비밀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도 공공기관 비밀의 범주를 모호하고 폭넓게 규정하고 비밀기관을 맡게 될 국가정보원의 권한을 지나치게 강력하게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보에 대한 접근을 제한할 위험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표7〉 중앙정부 정보공개 연차보고서

구분	청구건수	처리현황			
		소계	전부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2008년	60,262	45,712	30,969	7,555	7,188
	비율(%)	100	68	16	16
2007년	80,796	72,162	56,705	7,572	7,885
	비율(%)	100	79	10	11
2006년	57,732	52,962	41,864	5,352	5,746
	비율(%)	100	79	10	11
2005년	47,294	43,984	34,479	4,710	4,795

자료: 행정안전부

3) 언론의 자유

법과 관행속에서 언론의 자유는 얼마나 보장되어 있는가?

한국의 뉴스 미디어는 형식상 정치적으로 자유롭고 시장경쟁적이다. 신문들은 사적으로 경영되고 있으며 정부정책과 재계의 문제에 대해 비판적인 기사들을 생산하기도 한다. 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용인하고 있지만 여전히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미디어에 대해 직접적으로 검열을 실시한다.

제도적으로 볼 때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지만 새 정부 하에서 일어난 언론과 관련된 여러 가지 갈등들은 비판적인 언론의 활동을 억제하려는 정부의 시도를 보여준다. 한나라당은 2009년 7월22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신문법)”, “방송법”등 미디어 관련 법안을 국회에서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 법의 통과에 대해 야당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국회의장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으나 헌법재판소는 절차상의 문제를 인정했음에도 효력정지와 가처분 신청은 기각했다.

이 법은 시장에 원리에 따른 규제 완화라는 명목 하에 대기업과 외국자본의 방송진출을 허용함으로써 방송의 공공성을 크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한편 국경없는기자회(RSF)의 세계 언론자유 순위에서 한국은 2007년 178개국 중 39위, 2008년에는 47위, 2009년에는 69위, 2010년에는 42위에 랭크되었다.²⁾ 또한 2009년 6월에는 MBC 방송국의 “PD수첩” 제작에 관련된 4명의 프로듀서와 1명의 작가가 2008년 방송한 광우병소 보도도 인해 유죄판결을 받았다. 2011년 5월 2일 발표된 프리덤하우스의 「2011 언론자유보고서」는 한국의 언론자유지수를 32점으로 분류했고 67위였던 순위를 70위로 하

²⁾ http://fr.rsf.org/spip.php?page=classement&id_rubrique=1001

향 조정했다. 이와 같은 강등 사유에 대해 프리덤 하우스는 “검열과 함께 언론매체의 뉴스와 정보콘텐츠에 대한 정부 영향력의 개입이 확대” 되었으며 “최근 몇년간 온라인상에서 친북 또는 반정부 시각의 글이 삭제됐고, 정부가 대형 방송사의 경영에 개입”해왔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언론의 불편한 관계는 친정부적인 인사들을 언론계의 요직에 임명함으로써 더욱 증폭되었다. 2008년 3월 이명박 대통령 후보시절 대선캠프의 고문역할을 했던 최시중씨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취임했다. 최시중 씨는 정연주당시 KBS 사장의 해임을 종용하였으며 KBS 이사진이 개편된 후 사장의 교체를 둘러싼 갈등은 결국 3명의 기자와 PD를 파면·해임한 것을 비롯해, 8명의 언론인의 중징계로 이어졌다. 2008년 7월 17일에는 대선당시 이명박 후보의 방송특보를 담당했던 구본홍씨를 YTN 사장으로 선임했다. 사장의 교체를 정부의 방송장악 음모로 반대한 언론인들에 대한 탄압이 이어져 4명의 YTN 노조원이 체포되고 노조위원장이 구속되었다. YTN은 또한 38명의 노조원을 중징계하고 12명의 조합원을 고소했으며 6명의 기자를 해임했다.

〈표8〉 2008-2010 언론인 체포, 구속, 파면, 해고자 수

구분	인원	비고
체포	11	MBC PD수첩 6인, YTN 4인,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구속	1	YTN 1인
벌금	7	YTN 7인(5150만원)
파면	2	KBS 2인
해고	8	KBS 사장 포함 2인, YTN 6인

출처: 전국언론인 노동조합

정부는 일부 영상물에 대해서도 행정규제를 가하고 있다. 한국에서

는 영화를 극장에서 상영하기 위해서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상영등급 분류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벌금이 부과되고 극장은 영업정지를 당한다. 상영등급분류에는 예외규정이 있지만 예외가 적용되는 경우라도 해당 행정기관과 영화진흥위원회의 추천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작가들의 창작에 대해서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사례들이 있었다. 현기영의 소설, 김남주의 시 등을 금서로 지정하고, 용산참사 장례식에서 시를 낭송한 송경동 시인을 기소하였으며, 황지우 시인에게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 사퇴를 종용했다.

3. 사회경제적 환경

1) 빈곤

빈곤이 어느 정도 만연(예컨대 하루 생계비가 2달러 미만의 인구가 40% 이상 존재)되어 있는가?

〈표9〉 2010년 최저생계비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금액(원/월)	504,344	858,747	1,110,919	1,363,091	1,615,263	1,867,4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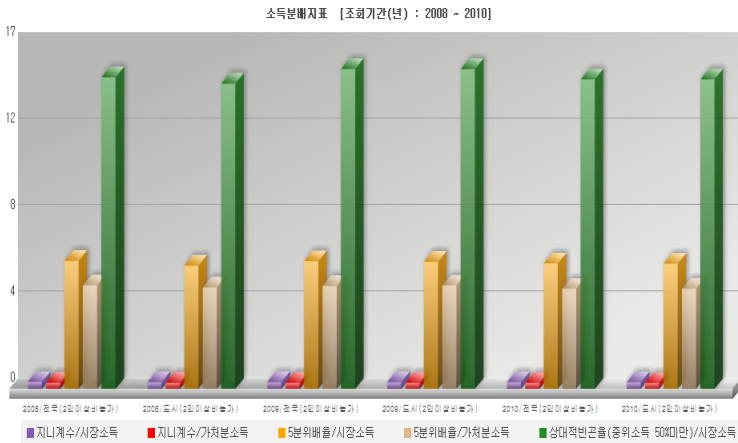
자료: 보건복지부

CIVICUS는 절대 빈곤률이 40% 이상일 때 시민사회 발전의 심각한 장애로 간주한다. 한국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4000원으로 일일 2달러 미만의 절대빈곤기준을 제시했을 때, 심각한 빈곤은 없다고 할 수 있

을 것이다. 그러나 국내에서 사용되는 빈곤의 기준을 적용할 경우 사회적인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빈곤의 문제들이 발견된다. 한국에서 절대빈곤률은 최저생계비의 소득을 얻지 못하는 가구의 비율이다.

2010년 한국의 최저 생계비는 <표9>와 같이 책정되었다.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으로 생활하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은 103만 명에 달하고, 최저 생계비 120% 이하 차상위 계층이 67만 명에 달하고 있다. 2009년의 경우 기초생활보호 대상자는 156만 9000명에 수급률은 3.2%(전체 인구 대비), 가구수로는 88만2925가구에 불과하다. 하지만 최저생계비 이하 도시근로자 가구 비율인 절대적 빈곤율은 2009년 14.4%에 달했다. 또한 중위소득 50% 미만 계층을 대상으로 한 상대빈곤률은 15% 선으로 대부분 10% 미만의 유럽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그림4〉 한국의 소득분배지표 (2008-2010)



자료: 국가통계포털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2) 내전

최근 5년 동안 내전을 경험한 적이 있는가?

남한 내부만 고려할 때 군사적인 사건들은 없었지만 남북관계를 고려할 때 시민사회의 성장과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각한 사건들이 발생했다. 취임 후 이명박 대통령은 기존의 햇볕정책과 거리를 두었고 친미적인 외교노선을 분명히 했다. 남북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 2008년 7월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씨가 피격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009년 하반기에는 북한이 북핵문제해결을 위한 6자회담에서 철수했고 장거리 미사일 실험발사와 제2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UN 안보리는 이에 대한 대응으로 북한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행했다. 또한 NLL을 둘러싼 갈등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2009년 11월 서해 대청도 부근 해역에서 무력충돌이 발생했다. 2010년 3월에는 천안함 사건이 발생했으며 11월에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으로 두 명의 해병과 두 명의 민간인이 사망하고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었다. 이와 같은 남북한 간 대립과 갈등은 한국사회를 더욱 보수화 시켰으며 시민사회의 활동을 위축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3) 심각한 종교적 갈등

심각한 종교적 혹은 인종적 갈등이 존재하는가?

최근 외국인 거주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한국은 단일인종 국가로서 심각한 인종적 갈등이 존재하지 않는다.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종교로 인한 심각한 대립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기독교 편향적인 공직 인사와 돌출적인 발언 등으로 인해 갈등이 일어났지만 중요한 대립은 일어나지 않았다.

4) 심각한 경제위기

심각한 경제위기(예컨대 GDP를 상회하는 외채)를 겪고 있는가?

2010년 한국의 GDP는 약 9860억 달러로 세계 15위 수준이다. 국가부채는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1997년 말 GDP 대비 11.9%(60.3조원), 김대중 정부 말기였던 2002년에는 18.2%(133.8조), 노무현 정부 말인 2007년에는 30.7%(299.2조)였고, 이명박 정부 집권 중반기인 2010년에

〈표10〉 사실상의 국가부채 증감현황 (단위 조원)

구분			2003	2007	2008	2009	참여정부대비 실용정부 증감 비교
실질적 인 부채	협의의 국가부 채*	국채		280.5	289.4	337.5	-참여정부(03-07년)동안 사실상 국가부채는 연평균 7.9%씩 증가한 반면에 실용정부(08-09)는 연평균 10.4%증가 -특히 2008년6.1%, 2009년 14.7% 증가함
		차입금		5.7	5.3	5.4	
		국고채무부담행위		2.9	3.2	3.2	
		지방정부부채(중복제외)		9.8	10.3	13.5	
		소계	165.7	298.9	308.3	359.6	
	광의의 국가부 채**	보증채무	80.6	33.1	28.1	29.8	
		부실채권정리기금부채	0.7	0.8	0.4	0.5	
		예금보험공사 및 예금보험관련부채	9.5	2.7	2.5	2.9	
		4대공적연금 책임준비금 부족액	381.7	608.8	684.1	768.8	
		통화안정증권잔액	105.5	150.3	126.9	149.2	
		한국은행 외화부채	8.1	30.4	13.3	16.0	
		준정부기관 및 공기업부채	182.6	220.5	264.0	310.6	
		소계	768.7	1046.6	1119.3	1261.8	
	합계		934.4	1345.5	1427.6	1637.4	

* IMF 매뉴얼에 의해 정부가 작성한 부채

** 잠재·우발적으로 국가가 부담해야하는 부채

자료: 이한구 의원이 작성한 “사실상의 국가부채 현황”(View & News 2010. 10. 5 에서 인용)

는 36.2%(407.2조)였다. 2010년 OECD 국가들의 평균 국가부채가 97.4%였고 미국 92.4%, 일본 197.2%, 유로 사용권 88.3%였던 점을 고려하면 한국의 국가부채는 매우 낮은 편이다. 이러한 결과는 공공재정의 건전성을 보여주는 지표로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선진국에 비해 한국의 공공재정지출이 너무 낮은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것은 또한 현재의 국제 경기 불황속에서 국민복지를 위한 지출이 축소되지 않는가라는 우려와도 연관되어 있다.

한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한구 의원이 2010.10.5일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 의하면, 2009년 한국의 사실상의 국가 부채는 1천 637조원으로 3년 전에 비해 291조원이 늘어났다. 국가 부채 중 직접 채무는 359조6천억 원으로 사상 최대였으며, 공공기관 부채도 5년간 58.4% 급증했다.

5) 심각한 사회적 위기

최근 2년 동안 심각한 사회적 위기를 경험한 적이 있는가?

조사 기간 동안 기아, 에이즈 만연,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심각한 사회적 위기를 경험한 적은 없지만 2010년 하반기 구제역으로 인해 축산가구가 직접적인 피해를 보았다. 전체적인 피해규모를 산출하기는 어렵지만 2011년 4월 18일 국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김영록 의원은 살처분 보상 등 직접피해액이 3조원, 사료산업 등 관련산업 2차 피해액이 3조 9천억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6) 심각한 사회·경제적 불평등

지니계수가 0.4 이상일 정도로 심각한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존재

하는가?

지니계수는 0과 1사이의 값을 가지는데, 대개 0.4 이상이면 소득분배의 불평등이 높은 것으로 간주된다. 2009년 OECD 국가들의 평균 지니계수는 0.313이었고 한국의 지니계수는 0.315였다. 상대적 빈곤률(중위소득기준)은 15.2%로 OECD 31개 회원국 중 6번째로 높은 수준이었다. 특히 자산의 불평등을 보여주는 순자산 지니계수는 2010년 0.63으로서, 소득보다는 자산보유에 있어서 경제적인 불평등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5-2008년 사이 중산층 비율은 57.5%에서 49.9%로 7.6% 감소했다.

복지 수준에 있어서 한국은 OECD 국가중 매우 낮은 수준에 놓여있다. 의료비 구성에서 공공지출이 OECD 평균 72.2%인데 비해 한국은 55.3%이다. 더군다나 공적인 부담률은 해마다 줄어드는 상황이다. GDP 대비 공교육비 지출도 한국은 2007년 4.2%인 반면 OECD 주요 국가들(한국과 1인당 GDP가 비슷했던 2002년 기준)은 4.7-8.4%에 이른다. 또한 2007년 OECD 국가의 GDP 대비 평균 사회복지 지출 규모는 19.8%인 반면 한국은 8.1%에 불과했다. 낙후된 복지와 상대적 불평등의 확대속에서 2005년 인구 10만명 당 자살률은 24.6명으로 OECD 국가들 중 가장 높았으며 출산율은 가장 낮은 수준이다.

7) 문맹률

성인문맹률이 40%를 넘는가?

한국의 문맹률은 전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2009년 OECD 국가들의 평균 문맹률은 1.65%였는데 비해 한국은 문맹률은 1.5%로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OECD 자료에서 특이한 점은 2000년 대비 2009년 한국의 문맹률이 1.4%에서 1.5%로 오히려 높아졌다는 것이다.

8) 정보통신 인프라

정보통신인프라가 결핍(인터넷접속 컴퓨터가 인구 10,000명당 5대 미만)되어 있지 않은가?

2010년 미국의 시장조사전문업체 Strategic Analytic에 따르면 2009년 기준으로 한국의 광대역 인터넷 보급률은 95%로 세계 1위를 차지했다.³⁾ 높은 보급률을 기록한 나라들은 싱가포르(88%), 네덜란드(86%), 덴마크(82%), 타이완(81%), 홍콩(81%) 등 주로 국토의 면적이 협소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이는 초고속케이블에 대한 접근에 있어서 지리적으로 협소한 나라들이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미국의 경우 58개 조사국 중 20위(60%)였다. SA는 한국의 높은 인터넷 보급률에 대해 고도로 도시화된 인구분포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때문이라고 설명했다.

2009년 1월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은 2007년 기준 30개 주요 경제권 국가의 인구 100명당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비율을 조사한 결과 한국이 30.6명으로 덴마크(36.3명), 아이슬란드(34.8명), 네덜란드(33.5명), 핀란드(33.3명), 스위스(32.1명)에 이어 6위를 차지했다고 발표했다. 이처럼 한국의 정보통신 인프라 환경은 매우 양호하다고 할 수 있다.

맺는말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2008-2010년 동안 한국의 시민사회환경은 보수정권의 등장과 진보세력의 후퇴, 국제경제의 위기에 따른 공공재원의 축소와 복지 후퇴, 공공성보다는 시장의 원리에 입각한 경

³⁾ http://tech.yahoo.com/news/afp/20090619/tc_afp/usskoreasingaporeasiaitbroadbandtelecominternet

제·사회정책, 햇별정책과 평화공존의 목표가 실종된 남북관계의 경색과 군사충돌의 위협 속에서 시민들의 정치적 권리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리들이 침해당하는 사례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시민사회의 환경을 측정하기 위해 CIVICUS가 던지는 질문들은 다소 모호하고 세부적인 현실보다는 제도적인 환경에 편향되어 있기도 하다. 또한 시민사회지표와 보고서 작성에 참고하도록 권고한 자료들 역시 보수적이거나 친시장적인 성격의 자료들도 있었다. 여기에 대해서는 CSI가 개별국가의 세부상황을 설명하기 보다는 세계의 여러 나라들의 시민사회의 규모와 건전성을 일관된 기준에 입각해 측정하고 비교하려는 목적이 강하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이는 국제적인 비교를 위해 활용가능 한 자료들을 생산하고 배포하는 조직과 데이터가 아직까지 다원화 되지 못하고 한정되어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한국은 최빈국에서 세계15위의 경제국가로 매우 짧은 기간 안에 압축성장을 달성했다. 세계적으로 저개발과 기아와 빈곤을 겪고 있으며 정치사회적인 분열과 갈등, 내전을 겪고 있는 나라들이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으며 한국은 이러한 나라들에 비해 시민사회가 성장하기 위한 조건들을 갖추고 있다. CSI 환경에 대한 조사는 국제적인 수준에서 이러한 조건들을 파악하는 것이다. 국제적인 수준에서 한국은 시민사회 발전을 위한 환경들을 충실히 갖추고 있지만, 아직 우리사회가 달성하고자 하는 인권과 민주주의 경제적인 정의에 도달하기까지에는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적지 않다는 것을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2011년 5월 6일 접수, 5월 18일 심사완료, 5월 19일 게재확정)

참고문헌

- 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외). 2010. 『2010 한국 표현의 자유 보고대회: 프랭크 라 튀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방한에 즈음하여』. 4월28일 국가인권위원회.
- 노대명 외. 2008.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방안 연구: 운영체계 및 생계급여 시행방안 중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신중화, 고영희. 2010. “한국과 필리핀 시민사회의 경제환경 비교” 『민주주의와 인권』. 10(2).
- 조영재. 2006. “한국시민사회의 환경”. 주성수 편저. 『한국시민사회지표: CIVICUS 국제공동연구 한국보고서』. 서울: 아르케.
- 한국행정연구원 사회조사센터. 2011. 『한국 사회의 위험과 위험관리 수준』.
- Amnesty International. 2008. *Policing the Candlelight Protests in south Korea*.
- Freedom House. 2011. *Freedom in the World 2011: The Authoritarian Challenge to Democracy*.
- Mati, M. Jacob, Silva, Federico, and Anderson Tracy. 2010. *Assessing and Strengthening Civil Society Worldwide*. CIVICUS.
- Transparency International Korea. 2006. 『한국의 반부패 시스템 실태보고 NIS(National Integrity System) 2006 요약본』.
- Transparency International. 2010.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2010*.
- Transparency international. 2010. *Global Corruption Barometer 2010*.
- World Bank Institute. *Worldwide Governance Indicators: Country Data Report for Korea, South, 1996-2009*. <http://www.govindicators.org>

Political, Social, and Economic Environment for the Korean Civil Society

Seong-Hyun Kim

This paper is the report concerning the "Environment for the Korean Civil Society". It was elaborated according to the second phase of CSI study(2008-2010), initiated and projected by the Third Sector Institute and CIVICUS. In this period, The political, social and economic environment for the Korean civil society has lost its autonomy and pluralism. We also observed the polarization of economic situations. The development of Korean civil society was restrained from these deteriorations of economic and social conditions. This study found that the Korean Society is bases on the sound environment for the development of civil society from the comparative view on the international level but there are so many issues for the development of human rights and economic justice on the national level.

Key words : Korean civil society, civil society index, CIVICUS, democracy, economic polarization, international civil society